새 정부의 고용 ·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핵심 과제*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상당히 어려운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올 2월에 출범하는 18대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 역시 해결의 출발점은 일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 · 훈련과 노동시장 전문가 12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관점에서 신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나라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세 체례의 정부 교체에도 고용, 특히 양질(decent)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취업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11년에 들어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청년취업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 실업문제는 대졸자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 5월 현재 전체 청년층(15~29세) 실업자 34만 2,000명 중 4년제 대졸자가 31.3%인 10만 7,000천 명이다. 전체 청년층 실업자 중 4년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2.1%에 비해 9.2%p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에는 71.3%로 떨어졌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학진학률을 떨어뜨

* 본고는 「18대 대통령 당선자 공약 실천을 위한 고용 · 직업능력개발 분야 20대 핵심과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리는 것은 시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대학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취업중심의 문화와 가치가 대학에 뿌리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임용 및 평가 시스템을 학생의 취업역량 제고와 취업지원의 관점에서 재편하여야 하며, 학생의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재와 교수 ·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문단위 중심의 경직적인 대학 내부의 조직구조가 역량 중심으로 유연화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 양성 중심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산학협력 시스템은 산업계 주도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모든 대학의 산학협력의 양태가 균일화되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동 센터는 기업의 수요(필요 인력의 수, 기술 수준, 직무, 연봉 수준, 매출액, 고용 인원, 생산성, 대표자의 비전, 연구소 유무 등)를 파악하며, 동시에 학교(대학)의 정보(학교 현황, 교육환경, 대학별 교수자원의 전문성, 학과별 양성 인력, 학생 특성, 교육 프로그램, 시설 및 기자재, 교육 목표 등)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로 기능을 함으로써 대학생의 현장실습을 구체화시키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대졸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를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대학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의 취업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공공부문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청년의무고용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원 채용제도의 다양화, 보조교사제의 확대, 초등학교 예체능 전담교사 배치 등을 통해 과도한 공시족이나 임용고사 준비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이 AS 차원에서 재학생뿐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 정부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졸 취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발전시켜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정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기업참여형 등 특성화고 직업교육 운영의 거버넌스를 다양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도 역시 내실화되어야 한다.

특성화고졸 인력의 직무수행능력은 여전히 산업계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졸취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특성화고 단계적으로 개발 · 운영되어야 하며, 또 '과정 이수형 직업자격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기아자동차회사에서의 특성화 실습생의 사망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내실화하는 '한국형 新 도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권고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고졸을 채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졸의 숙련에 적합하고 경력 개발이 가능한 고졸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괜찮은 고졸 일자리를 유형화하고, 전망하여 발굴하여야 하며, 국가전략산업 직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의 우수 산업인재 조기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성화고-고등교육기관-산업체 등의 연계체계를 다양화하여 고교 직업교육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틀 속에서 전문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전문대학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하여야 한다. 산업체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선행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평가인정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현행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심에서 학사과정 중심으로 확대 · 개편하고, 학위 및 비학위과정, 전공심화과정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취약하여 청소년의 선호 직업이 교사, 공무원 등 안정성이 높은 소수의 직업으로 쏠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적성이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설계 없이 무조건 대학으로 진학하여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진로개발 교육을 확대 · 보급하여야 한다. '쉼표학기제' 등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쉼표 기간을 마련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전환학기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진로교사의 대폭적인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풀인 커리어 코치를 양성하고, 이들을 전국 초 · 중등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업교육 졸업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개발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대학의 평생교육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산업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후 이수자의 취업이나 창업이 미흡한 현실이다. 기업체 수요와 훈련생 수요를 분별하여 정부가 적극 지원할 분야와 지원을 지양할 분야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 직업능력개발기관의 경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직업능력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불필요한 복잡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훈련 종류에 따라 다른 훈련과정 인정기관을 일원화하여 하나의 기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공공직업능력개발기관이 개편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근로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자이지만 실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2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시장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취약계층의 직업훈련과정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성과도 낮은 현실이다.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훈련 모형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직업훈련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복지지원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